

어등산 관광단지·맥쿼리 순환도로 재협상 ‘뜨거운 감자’

국회 행안위 내일 광주시 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반부에 열리는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미숙한 행정으로 15년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 불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행정 역사상 가장 실패한 협상 행정으로 꼽히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자(이하 맥쿼리)와의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 민선 7기 주력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와 AI(인공지능), 시·도 행정통합 등도 국감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광주시와 대전시, 부산시 등을 상대로 국감이 열린다. 23일에는 광주지방경찰청 등이 국회에서 국감을 받는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참석인원 최소화,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을 조건으로 국회에서 진행한다.

광주시 국감에 나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광주시에 총 900여건에 이르는 반대한 국감 자료를 요청했다. 이 중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이 자료 요청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행담보 상환 등)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의원이 이미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맥쿼리 재협상 문제 등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동 의원이 자료 요청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대표 현안사업이지만, 기존 사업자와 법적다툼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기존 공모안보다 오히려 상가면적을 두배로 늘린 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려했으나, 지역 사회 반발과 법원이 기존 업체측의 ‘우선협

900여건 반대한 자료 요청

어등산, 갑질 행정 논란

맥쿼리 실패한 협상 질타 예상

광주형 일자리·AI도 검증대

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김 의원이 집중적으로 요청한 사업 이행보증금 담보 상황 등은 ‘갑질 행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최소 5000억원이 넘는 총 사업비 중 10%인 500여억원을 보증금으로 일시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적인 행정 행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이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1%수준에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에 한해 10% 수준에서 사업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조성사업 협상안으로 ‘총 사업비 중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일시 납부’토록 한 점 등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발상”이라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어등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부정적 의견을 내었다.

이형석 의원이 버리고 있는 광주시와 맥쿼리간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측은 “광주시와 맥쿼리간 재협상은 비용 절감과 기존 대출금 일부에 대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사업변경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측 브로커가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한 협



20일 오전 광주시 광주 북구 오희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투자 수익률을 과다 책정하고 투자금을 부풀린 부분과 광주시가 1·2심 승소에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유 등을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국감 의원들은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된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대한민국 1호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최근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벼랑끝 자영업자·영세기업 세심한 세정·금융 지원 촉구

광주국세청·한은본부 국감

20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광주·전남의 자영업 5년 생존율이 각각 26.5%, 27.3%를 기록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광주청이 적극적인 금융컨설팅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 김태을 의원은 “광주가 최근 10년간 어음부도율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광주지역 경제가 타지역에 비해 더 어

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하면서 “코로나19로 광주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고 있다. 소규모 영세기업을 배려하는 납세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광주·전남·북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돼 광주청의 세심한 세정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전남서남권과 목포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목포지역본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광주전

남본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지역의 실업·고용률은 그대로인 반면,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광주·전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 중앙 한국은행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 대한 분석이 잘 이뤄지고, 살아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윤진 의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먼저 다가가 이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세한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비춰 내년도 세무조사를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원전 2호’ 월성1호기 해체 수순 밟을 듯…15년 이상 소요

해체 비용 8000억원 이상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작년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았다. 현재는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체 승인 신청서에는 해체 계획과 방법, 안전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일정 등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해체 승인 신청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마련한 뒤 이를 원안위에 제출한다. 이후 원안위는 해외 선진기업의 자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등을 통해 해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증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 복원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해체 완료 상황은 또다시 원안위에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관련 내용을 검

토하고 월성 1호기의 운영허가를 종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는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이 지난해 세운 ‘중기 경영목표’(2020~2024년) 상으로는 2020년 해체 계획서 개발 착수, 2021년 제염 제거계획 수립, 2022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계획, 2023년 주민 의견 수렴, 2024년 최종 해체 계획서 제출 등이 예정됐다. 해체 비용은 8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전 해체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1개 호기당 8129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해체 완료 시점은 2032년 말까지다.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는 불가피”

청와대는 20일 라인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이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의견상 물 밀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장관

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절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